

# 2022년 인천대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 감사 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10.17.~10.21.까지 5일간 1개반 6명이 참여하여 2019년 9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인천대공원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2건(본처분 16건, 현지처분 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1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 감사 결과

구 분	계 (건/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기관 경고 (건)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소계	환수 회수	환급 시효 결손	소계	경징계	훈계	
계(건/명)	55/2	51	10	14	3	2/ 19,630	2/ 19,630	-	1/2	-	1/2	1
본 처 분	49/2	45	6	12	3	2/ 19,630	2/ 19,630	-	1/2	-	1/2	1
현지조치	6/-	6	4	2	-	-	-	-	-	-	-	-

**2022년 인천대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목록]**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 설계공모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등을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건축물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설계공모 1건을 실시하였다.

### 1. 설계공모 시행 소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중전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회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공원사업소 설계공모 공모 참가자에게는 사전접촉 금지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나 심사위원회에게는 사전접촉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회에 미리 알리지 않아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소홀히 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였다.

또한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등은 등록(응모신청) 시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 접수로만 등록을 진행하였다.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공개 미흡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라고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지침이 개정 후에도 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세움터가 아닌 인천대공원 누리집, 응모신청자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만 공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원 시설물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팀

내 용

### 1. 공원 내 건축물 관련 절차 이행 소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 건축물의 공사완료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건축협약 없이 건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건축물 ❶건이 존재한다.

그런데 ♠♠, ♠♠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에 해당하고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에 따라 총괄표제부를 작성·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건축물이 총괄표제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변경 등의 행정절차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 2.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 따르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원 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설치 안전기준 및 ②관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①설치안전기준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관리안전기준으로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주는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별표2에서 공원의 편의시설로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자는 대지의 안정, 대지의 조정, 구조 내력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 ♠♠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2022년(9월 현재) 인천대공원의 이용자 현황은 9월말 기준 전년 대비 이용객 수는 〇〇%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인천대공원등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증가하는 이용자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안전기준 및 관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함은 물론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지의 안정, 구조내력 등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시설물 노후화로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파손, 시설물 안전 위험, 시설물 기능불량, 시설물 사용편의 등에 미흡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 3. 공원관리사무소 유지·관리 소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건축분야에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 내 ‘공원관리사무소’는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함에 따라 감사일 현재 제3종시설물로 지정(요청)·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일부 미장벽돌의 부분 균열 및 배부름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① 건축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변경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원 내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안전위험, 기능불량, 사용편의 등에 대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원 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관련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수도법」 제3조 제31호 및 32호에서 “절수설비(節水設備)”에 대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절수기기”는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은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20~2022년 ☞☞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절수설비등을 설치·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절수설비등에 대한 설치확인서, 인증서(환경마크표지 등), 설치·납품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앙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훈 계)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장물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141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사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 8. 19., 일부개정)」Ⅱ.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가구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 이승훈묘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타 지역 방문객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 조성사업(이하 “☸☸조성공사”이라 한다) 및 ☸☸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하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여 시행 중이다.

사업소에서는 공원조성공사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20●●.●●.●●. ‘도시계획시설 ☸☸ 조성사업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호)’를 통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였고 미협의 토지 및 물건(영업)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 수용사용 개시되었다.

이에 사업소에서는 건축물 등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2000.00.00. 착수하였고 당시 사업구역에서는 토지주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이사(이전)와 공원조성공사 철거공정이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공원조성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이사(이전) 등의 진행상황 파악 및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 가구, 집기류 등 생활폐기물(이하 “발생폐기물”이라 한다) 방치여부를 자세하게 현지 조사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직접 처리 가능한지 여부 등 처리방법을 시공사,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검토하여 발주청 보고 및 시공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2000.00.00. 사업장폐기물 발생 관련 1차 실정보고가 접수되자 관련법령 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혼합건설폐기물 증가량에 대한 실정보고를 승인통보 하였으며, 2000.00.00. 2차 실정보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검토내용으로 실정보고를 승인통보 하였다.

그러나 당초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업대상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서,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철거 전 우선 제거 후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철거공정 및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혼합건설 폐기물 증가량으로 실정보고를 승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① 용역·공사 감독자에 대하여 감독업무규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인천대공원 ☸☸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7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라 용역과업을 수행중에 계약자의 요청 또는 용역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43조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설계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 인천대공원 내 ☼☼의 노후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이용 확대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인천대공원 ☼☼ 개보수사업’(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당시 ☼☼보수공사의 주공종 자재인 ◆◆◆◆를 선정하면서 구매단가, 타 시설 설치사례, 여러 제품간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내부방침을 득하여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주요 자재에 대한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준공 시에도 설계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용역성과품)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소에서는 2000.00.00. 관급자재(◆◆◆◆)를 계약하였음에도 뒤늦게 ☼☼에 설치되는 사양(규격)과 부적합 및 △△연맹의 공승인을 득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 요청을 하고 2000.00.00.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시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보수공사 착공(2000.00.00.) 후 ◆◆◆◆ 설치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2000.00.00.) 및 당초 준공 예정일(2000.00.00.) 대비 00일이 지연된 2000.00.00. 공사를 준공하게 됨으로서 전체 사업계획 및 론볼경기장 사용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실시설계용역 관련 감독자들에 대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준공검사 철저 등 감독업무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기 관 경 고 · 권 고 · 통 보

제 목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팀, ☆팀, ◇팀,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19년 9월 이후, 이하 같다) 중 총 〇〇〇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1.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공사·용역 및 물품의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〇〇〇건(공사 〇〇〇, 물품 〇〇〇)의 계약에 있어서 〇〇〇건(공사 〇〇〇, 물품 〇〇)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지 않음으로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부적절하게 정하였다.

## 2. 정기 하자검사 실시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천대공원사업소 △팀에서는 매년 2회(상, 하반기)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 및 물품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해당 사업담당부서(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업담당부서(팀)에서는 요청받은 하자검사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고, △팀에서는 사업담당부서(팀)에서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정기 하자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기간(2022년 10월) 중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〇〇〇건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 하자검사의 실시 및 실시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3. 공사계약 최종검사 실시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각 호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계약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종검사는 계약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담 관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 △팀에서는 검사대상기간 중 매월말 최종검사 시기가 도래한 공사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부서(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담당부서(팀)에서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전에 최종검사를 실시 또는 만료 후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목적물에 대한 최종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팀에서는 사업담당부서(팀)의 최종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검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일 현재(2022년 10월) 감사대상기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 〇〇〇건에 대한 최종검사 실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〇〇〇건에 대하여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전 또는 만료 후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종검사의 실시 및 실시사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기관경고]** 계약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및 하자검사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하자검사 실시 대상의 선정 시기, 하자검사의 실시 및 결과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가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으로의 하자보수보증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인조잔디) 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 □팀(이하 “□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인 인조잔디를 자재(인조잔디) 선정위원회를 거쳐 20○○.○○.○○.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였다.

###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지표의 적절한 구성 및 적용 미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지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지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팀에서는 ‘☘☘ 정비사업’의 인조잔디를 구매하기 위해 ‘인조잔디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며, 인조잔디 선정위원회 평가 대상으로 동일한 규격(T=55mm)의 조달청 우수제품 중 우선(의무)구매대상 인증개수가 많은 상위 5개 제품의 납품 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

(30점, □팀)와 정성적 평가(70점, 인조잔디 선정위원회)를 실시하였다.

□팀에서는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평가 배점을 제안가격(10점), 시공 실적(5점), 공인인증(10점), 품질기준(5점)으로 구성하였고, ‘공인인증’ 항목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정 상품인증 수’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세부배점을 구성하였다.

한편 □팀에서는 제안서 평가대상 5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요청 시 제안서 (인조잔디설명서) 서식을 송부하며, 해당 서식의 ‘비고’란 관련 증빙자료 제출사항 중 ‘조달청 인정 상품인증목록(품질인증, 우선/의무구매 등)’에는 우수조달, 녹색기술,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특허 등을 명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로 우수조달, 녹색기술,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특허 등의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팀에서는 제안서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 당초 업체에서 제안서 서식 (인조잔디 설명서) ‘비고’란의 내용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안된 5개 제품을 조회했을 때 보여지는 인증<sup>1)</sup> 이외의 인증<sup>2)</sup>도 인정함으로써 ‘조달청 인정 상품인증 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조회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모든 인증서(해당제품의 유효기간 내)를 인정하였을 경우 당초 2위, 3위, 4위의 순위가 4위, 2위, 3위로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 있는 설정과 적용에 미흡하였다.

더욱이 ‘조달청 인정 상품인증’은 당초 제안서 평가를 위한 대상 업체 선정 기준과 중복되는 지표임에도 이를 정량적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10점을 배점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의 적정한 구성에 미흡하였다.

---

1) 우수조달물품, 환경표지제품, 한국표준규격, 성능인증제품, 우수발명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녹색기술제품, 특허, 소상공인  
2) 품질인증지정서, 녹색기술인증서, K마크인증서, 품질인증업체지정서

## 2. 정량적 평가 사항 기재 소홀

□팀에서는 제안서 정량적 평가지표 중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배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일부 업체는 제안된 규격 이외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 포함된 실적증명서도 제출하였다.

□팀에서는 시공실적 지표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증명서 중 제안된 규격에 대한 실적만을 구분하여 정량적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제안된 규격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전체 규격에 대한 실적증명이 제안된 규격에 대한 실적증명 세부배점의 인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업체가 제안서(인조잔디 설명서)에 기재한 실적(전체 규격에 대한 실적)을 정량적 평가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2022년 10월) 제안된 규격에 대한 실적만을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제안서에 기재한 실적과 제안된 규격의 실적에 차이가 있었으며, (주)A, (주)B, (주)C의 경우에는 전체 규격의 실적이 세부배점의 만점에 해당하여 제안된 규격이 차지하는 실적에 따라 세부배점 득점 사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평가 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자재선정을 위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지표 구성 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제 규정들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적절한 지표를 구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기재로 평가 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수입금 처리 지연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 ◎팀(이하 “◎팀”이라 한다)에서는 2017년부터 인천대공원 내에서 ♡♡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의 예약은 인천광역시 온라인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체험료 등은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 결제대행사 및 가상계좌(현금 납부)를 통해 ◎팀에서 관리하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세입의 징수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여야 하며,

징수의 방법은 징수관이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되,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 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체험료 등이 결제대행사 및 가상계좌에 의해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입금을 세입 처리하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팀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년 9월 이후) 중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체험료 등의 수입액을 통상 일주일 단위로 세입 처리하여 납입함으로써 수입금의 금고 납입을 지연 처리하였다.

특히 20●●년부터는 매주 1회 금고에 수입금을 납입하며 지난 주(월요일~금요일)에 입금된 금액만을 세입 처리하여 금고에 납입하고, 수입금 납입일이 속하는 주에 입금된 금액은 그 다음 주에 세입 처리 및 납입함으로써 금고 납입 시점에는 납입 기한을 경과한 수입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20●●년부터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 처리도 지연함으로써 ♡♡의 수입금에 대한 세입 처리 및 납입을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 체험료 등 수입금이 적정 기한 내 처리되도록 수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원점용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청에 점용(변경 포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거나 변경 받는 자는 종별 구분(제1종~제5종)에 따라 「지방세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의 부여기관은 도시공원점용허가 등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고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〇〇년도부터 20〇〇년도 현재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〇〇건 중 〇〇건에 대한 면허 부여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등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면허 부여 등의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부여 등의 사실 통보와 면허세 납부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 정 요 구

제 목 보험료등 사후정산 미흡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절차에 따라 공사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〇〇년〇〇월부터 20〇〇년〇〇월까지 ☞☞ 등 총 〇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 중 사업주 부담

금액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하였어야 함에도 근로자 개인 부담금액을 포함하여 잘못 정산하여 총 △△을 과다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① ☞ 등 총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료 사후정산 부당지급액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건설공사 준공 시에는 건강·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는 ♠♠ 등 ○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 등 신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 등 ○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도시공원 조성 시행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는 ♣♣공원과 ♠♠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감사 일 현재까지 지적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적확정측량 의무대상 고시 전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원조성사업 완료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외 1개 공원 조성사업 착공 사실을 해당 지적 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지적확정측량 의무대상 고시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도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공원 등 ●개 공원에 ●●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유지·보수 등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놀이시설 및 기구별 안전점검 항목을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날부터 3개월 내에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신청하였고, 안전점검을 일정 기간 월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안전교육을 변경된 날부터 3개월까지 이수하지 않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7조의7 제9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항 제10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일 경우에는 3일) 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및 「2021년 공무원단체·임금협약서」에 따라 청원경찰과 공무원에 준용된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의 2019년~2022년 8월까지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〇명이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자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회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직원의 특별휴가 사용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관리하고 있다.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설 손해보험 가입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 10개소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문휴게소 외 2개소는 사용·수익허가서에 손해보험증서 제출 등의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손해보험증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사업소는 ☞ 외 ㉠개소의 사용수익허가서에 보험금 수령인을 인천대공원 사업소로 하는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보험금수령인이 ㉡㉢㉣ 되어있는 손해보험증서를 제출받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공유재산 사용·수익자의 허가 조건 이행여부 미확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허가서[별지 10호서식]의 허가 조건 제9조에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가 아닌 ㉡㉢㉣가 보험가입자로 되어있는 손해보험증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재산 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대부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 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자가 공유 재산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사고발생시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허가조건 준수, 원상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선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2000.00.00.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000은 2000.00.00. 부터 2021.00.00.00.까지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미 이수하여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다.

##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감독직 직위에 있는 ■팀장이 있음에도 ■팀 주무관 ○○○을 20○○.○○.○○. 선임함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팀, ☆팀, ◎팀, ◇팀

내 용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〇개 부서에서 〇〇〇대를 운영하고 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소홀

「인천대공원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하 “운영관리방침”이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 의하면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나 보관기간이 최소 〇〇일에서 최대 〇〇일까지 보관하여 관리하였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영상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하드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자료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등 영상정보 보관 관리에 미흡하였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현행화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대공원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라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설치한 CCTV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확인한 결과 2000.00.00. 운영관리방침 공개 이후 2000년 00대, 2000년 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였고 2000.00.00. CCTV 통합관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처리 방법 등에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인천대공원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미 반영된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개된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천대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 수범사례

##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협업과제 적극 추진

- ❖ 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

### □ 추진개요

-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무네미로 236(인천대공원 내)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부터 제46조의8까지
- 사업현황

사 업 명	협업기관	기 간	내 용	비 고
시드볼트 종자보존 사업	백두대간수목원	계속사업 (20년 업무협약)	- 인천수목원 종자 중복보존 추진 - 종자 보존, 연구 및 전시 등 지원	
산림습원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	국립수목원	계속사업 (20~22)	- 인천, 경기, 충북지역 산림습원 모니터링 및 식물상 조사 등	
도시수목 탄소흡수량 조사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	'22.1.~12.	- 도시수목의 탄소 흡수량 조사 및 적합수종 선정 등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2.9.~10	- 암 생존자의 증상별 산림치유프로그램 효과 검증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22.3.~12.	-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 반디논 모내기, 벼베기 체험 등	

### □ 추진실적 및 현황

- 협업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 시드볼트 종자보존 사업 : 수목원 종자 총 11과 16종 16점 기탁(2020~2021)  
※ 2019년 종자보전협의체 참여, 2020년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시드볼트 종자 Art-SEM 사진 전시회 개최 : 총 7,013명 방문
- 산림습원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 : 현장 모니터링 조사 10회 수행(22.4.~10.)  
※ 2020~2022년 주요식물자원 총 81종, 421본 채집, 연구보고서 3건 발간
- 도시수목 탄소 흡수량 조사 : 수목 55종 선정 및 360건 조사 수행(22.5.~10.)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암 생존자의 증상별 프로그램 효과 검증 12회 수행
-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 총 9회 운영, 311명 참여

## □ 수범사항

-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추진을 통한 식물유전자원 수집, 증식, 보전 및 연구 등 수목원 고유 기능 강화 및 인천시 산림생명자원 확보에 기여
- 주요 현안과제로 수목의 탄소흡수원으로써 가치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인천시 기후변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산림치유의 효과 검증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 관련사진



시드볼트 종자보존 사업



종자 Art-SEM 사진 전시회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



산림습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협약서**

 <p><b>인천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간 중자 보존 및 교류협력 협약서</b></p> <p>국립백두대간수목원</p>	<p>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p> <p><b>제7조(효력)</b>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p> <p><b>제8조(협약의 해지)</b> 본 협약은 양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동의하에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9조(법적 권리·의무)</b> 본 협약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p> <p><b>제10조(서명)</b>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2020년 03월 0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협약서 2부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p> <p>2020년 03월 05일</p>
<p>인천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약정한다.</p> <p><b>제1조(목적)</b> 본 협약은 인천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생물다양성 활용과 산림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시드뱅크 구축보존 등 상호발전과 협력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협약기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수목원</li> <li>2. 국립백두대간수목원</li> </ol>	
<p><b>제3조(기본 원칙)</b>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p> <p><b>제4조(협력 분야)</b>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수목원 보유 산림식물종자 시드뱅크 구축보존</li> <li>2. 산림식물자원의 종자 수집 및 분석</li> <li>3. 종자와 표본을 포함한 식물정보 교류</li> <li>4. 산림식물자원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li> <li>5. 그 밖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인천대공원사업소장</b></p> <p>김 병 진</p> <p>2020.03.05</p>
<p><b>제5조(지적 재산)</b> 모든 결과는 양 당사자의 지적 재산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와 공유할 수 없다.</p> <p><b>제6조(협약의 조정)</b> 본 협약을 이행할 때 협약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p>	 <p><b>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b></p> <p>김 용 하</p> <p>2020.03.05</p>

☐ 종자 Art-SEM 사진 전시회 보도자료

## 경인매일

보 전해
종합
경기
인천
서울
경제
포토
오락·이벤트
기획·특집

---

이전
다음

### 인천시, 인천수목원에서 종자 Art-SEM 사진 특별전 개최

▶ [인천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 [인천 2022년 7월 1주](#) ▶ [인천 7월 1주](#)

인천수목원에서 씨앗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출처: Art-SEM 사진 특별전 2022의 사진작가=김정아씨

인천·일출포가(가)인천수목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수목원관리소는 오는 19일부터 씨앗,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라는 주제로 종자 Art-SEM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주도간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과 씨앗과 꽃가루를 최대 30배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주요 작품은 복수초, 할미꽃, 학마리 등으로 인천수목원에서 매년 볼 수 있는 식물들 포함해 씨앗 23점, 꽃가루 5점이다.

씨앗, 꽃가루는 육체 이미지와 달리 색을 잃혀 미숙한 아름다움이 어둠속에서 인내로써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뉴스

보 전해
종합
경기
인천
서울
경제
포토
오락·이벤트
기획·특집

---

이전
다음

### 인천수목원에서 씨앗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 [인천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 [인천 2022년 7월 1주](#) ▶ [인천 7월 1주](#)

인천시, 19일부터 인천수목원에서 종자 Art-SEM 사진 특별전 개최



출처: Art-SEM 사진 특별전 2022의 사진작가=김정아씨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수목원에서 오는 19일부터 씨앗,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라는 주제로 종자 Art-SEM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주도간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의 씨앗과 꽃가루를 최대 30배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주요 작품은 복수초, 할미꽃, 학마리 등으로 인천수목원에서 매년 볼 수 있는 식물들 포함해 씨앗 23점, 꽃가루 5점이다.

씨앗, 꽃가루는 육체 이미지와 달리 색을 잃혀 미숙한 아름다움이 어둠속에서 인내로써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IS

최고/최신/특수자료

---



실시간 정치 국제 경제 문화 산업 IT/에너지 사회 수도권 직장 문화 스포츠 연예

---

10월 2일 - 2박3일 "아름다운 직장인"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일터' 만들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수도권

수도권민선

서울

수도권민선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충북

---

직장이 먼 **채대리** 자차를 고민할때

## 인천대공원, 반디는 풍성한 가을걷이 한마당

출판: 2022.11.19 09:02:00

11월 19일










사진 = 인천대공원

11월 19일

(인천=뉴스1) 황성환 기자 = 인천시는 19일 오전에 풍성한 가을걷이 한마당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가을걷이 행사를 개최하고 가을걷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을걷이 한마당은 19일 22일 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불꽃피리우는 금강구곡과 영동화가 서식하는 금강구곡 시민농장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250여회 농작물 한박은 화곡(무곡산 벼농사 재현단) 최성일이 주관한 화곡구곡 직접 가을 벼를 전통방식으로 낫과 수레, 탈곡기를 활용하 수확하는 가을걷이 행사로 제철인 화곡도 재현을 포함하는 시민 누구나 가을걷이 체험을 할 수 있다.

